VISION 3

농어촌
·
농식품

나라의 뿌리, 농어업·농어촌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.

우리의 생명산업 농어업, 우리의 고향 농어촌

8 선진농어업정책, 글로벌화하겠습니다.

'농·어장에서 식탁까지 종합산업화'

- 농산물 품질 경쟁력 높여 국제화에 대응
- 친환경 · 고품질 농업 획기적 확대 지원
- 식품산업 지원체계 일원화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
- 첨단농어업 선도할 전문인 양성
- 첨단신기술 개발역량 강화
- 한계농지 거래규제 완화
- 농어촌 EXPO 개최로 도·농 상생 촉진

9 농어촌 생활수준, 높이겠습니다.

'살맛 나는 농어촌 만들기'

- 상·하수도 보급률 2012년까지 70%로 확충
-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
- 기숙형 공립고(150개) 선정 농어촌에 우선 배치
- 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
- 농어촌 뉴타운 조성

10 농어민 살림, 보호하겠습니다.

'돈 버는 농어업, 빚 없는 농어민으로'

-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
- 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 제정
- 농어업재해에 대한 선지불·후정산시스템 확립
- 비료·농약·사료 등 조세감면 연장
- 농기계임대사업단 설치
- 농어민정년기준법 제정

VISION 3

농어촌·농식품

목표 8

선진농어업정책, 글로벌화하겠습니다.

'농·어장에서 식탁까지 종합산업화'

농산물 품질 경쟁력 높여 국제화에 대응 / 친환경 품질 농어업, 기술집약형 식품산업과 함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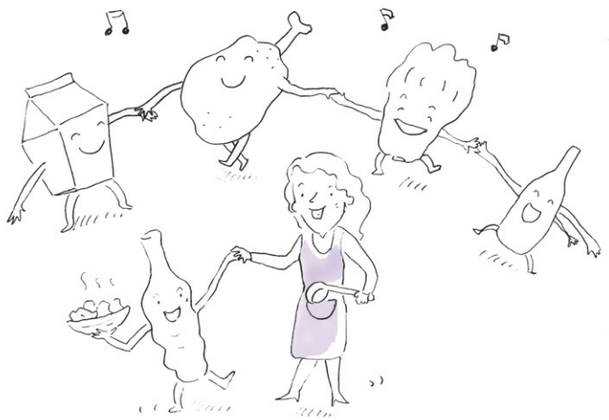
DDA/FTA 등 국제개방시대에 농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는 이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. 농업의 국제경쟁체제 전환은 낙후된 농업현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.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.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. 품질이 이를 보장합니다.

■ 수출·국제화 농어업, 친환경 품질 농어업, 기술집약형 식품산업을 우리 농어업 경쟁력 3대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.

■ 1970년대 수출입국 정신으로 공격적 수출 농수산식품업을 지향하겠습니다. 수출농·기업농·기술농의 육성, 농업경영체 규모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. 세계 10대 명품·10대 브랜드 발굴과 육성, 수출시장 다변화, 대표브랜드 수출기업 육성, 한상(韓商) 네트워크 구축 등이 그 수단입니다.

■ 친환경 유기농·바이오 산업, 농식품 가공산업, 농업의 융합산업화로 성장 및 수출 동력화하겠습니다. 농산식품의 품질을 높여 일본·중국 등 거대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. 친환경농업 활성화로 품질고급화, 수출지향형 대형 농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겠습니다.

■ 농어촌 지역의 첨단정보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.



(FQ)03한 나라 본 책(108~133) 2008.3.29 5:7 AM 페이지 112 western

친환경 · 고품질 농업 획기적 확대 지원 / 농업의 고품질화와 유통개선

고품질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에서 나오고 품질의 고급화 없이 국제화는 물론 고소득 웰빙시대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. 웰빙 추세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 관련 신기술 개발과 이의 유통체계 혁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.

■ **신기술(IT · BT · NT 등)을 활용하여 고품질 미래형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.** 고품질과 수출의 전제인 친환경 기술농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.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.

■ **농축수산물 유통을 혁신하여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하고, 농축수산물 공급채널을 현대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유통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.** 고품질 농산물 유통을 위해 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지원을 확대하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, 원산지표시 강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. 시 · 군별 유통전담회사를 설립하여 자기지역 농수산물을 책임지고 전담 판매케 하고 농 · 수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.

식품산업 지원체계 일원화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 / 식품 · 제조 · 가공 등 2차산업과 연계협력, 세계화 촉진

식품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2차 산업인 식품 제조 · 가공 산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. 이를 위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으로 농어업인에게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해야 합니다. 나아가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해야 합니다.

■ **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식품 품질을 철저하고 일관되게 책임관리하겠습니다.** 식품분야로의 영역확대를 계기삼아 농수산 식품가공업의 국제화로 신성장동력화하겠습니다.

■ **식품 R&D 허브 및 수출기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연구, 마케팅 등 일괄지원을 통해 농어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.** 식품산업 지원 ·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관계 법령과 추진행정체계를 정비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금년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.

■ **식품품질인증기관을 단일화하며 소비자의 안전 · 위생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.** 지식경제기반형 특산식품 중소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. 식자재가공 · 공급시스템을 확립하여 외식산업을 통한 국산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.

(FQ)03한 나라 본 책(108~133) 2008.3.29 5:7 AM 페이지 114 western

■ 고유의 전통식품과 향토음식(인삼, 김치, 한약재, 전통주, 원예작물 등)에 대한 사용원료·식품규격 표시제도 도입으로 품질관리를 차별화·명품화하며, 전통주 제조면허시설요건과 제조방법규제를 완화해 우리 식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 세계적 명주 개발을 위한 R&D 투자 등 전통주 및 인삼 산업을 육성하고 한류를 특화하며, 다양한 해외 한식체험행사를 통한 한식의 세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
첨단농어업 선도할 전문인 양성 / 여성인력 지원 강화

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의 인적자원 육성과 농업의 기업경영체제 육성이 절실합니다.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경영주로서의 권리보장 등 커진 역할에 맞는 법적·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.

■ 경쟁력 있는 농기업 수준의 농어업인 CEO 양성으로 고부가가치 첨단농어업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.

■ 농업교육예산을 확대하고,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. 전문농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농대의 영농정착과정 및 후계농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■ 기업적 경영체제를 갖춘 농업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농가경영 단계별 맞춤지원을 하겠습니다. 수출농기업, 친환경농기업, 기술집약식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. 농수산물 가공·유통법인을 지원하여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

■ 여성농어업인센터(창업교육 정착) 지원, 세제·금융제도상 지원 확대 및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. 농어업인 후계인력사업에 여성 참여기회를 넓히고, 4대 보험·건강검진 지원 확대, 자기계발·교양증진 등 각종 복지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■ 국제결혼 여성의 복지와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. 외국어 농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취업기회를 늘리고 사회적응력을 키우겠습니다.

(FQ)03한 나라 본 책(108~133) 2008.3.29 5:7 AM 페이지 116 western

첨단신기술 개발역량 강화 / 세계 5위 품종대국 지향

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분야의 첨단기술개발이 시급합니다. 선진농업의 첩경은 낙후된 농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데 달려있습니다.

- 농업기술개발 R&D투자를 확대(농수산 전 예산의 7%로)하여 첨단신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농림바이오 전용펀드를 도입, 사업화 연구의 집중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농림바이오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.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산물 품종개량기술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개인 육종가의 품종개발을 지원하고, 종자산업 투자확대를 통해 로열티 부담을 줄이는 등 세계 5위권 품종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.

- 노력절감형 농법, 시설(예 : 하우스 하이베드) 및 기구의 개발보급으로 농작업을 거들겠습니다.

한계농지 거래규제 완화 / 전용절차 허가제를 신고제로

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규제가 심하고 전용절차가 복잡해 농가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.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계농지에 대해 농지거래 및 이용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한계농지의 소유·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겠습니다. 농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개발가능 용지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. 택지·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절차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고, 수목장·치유의 숲 등 친환경시설이 가능하도록 국유림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.

-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 등 각종 법령·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.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완화해서 농지·산지 전용과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방지대책 및 친환경적 활용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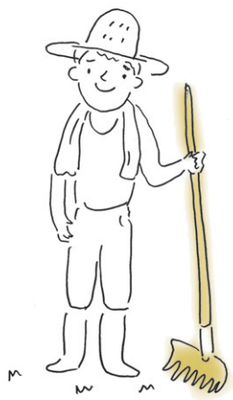


농어촌 EXPO 개최로 도·농 상생 촉진 / 농어촌 위한 창의적 발상 유도

농·축산물 식품관련전시회 등이 연중 개최되고 있으나, 산발적인 개최로 인지도가 낮고 개별 행사 규모가 작아 농식품 홍보효과와 소비자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.

- '도·농 상생과 교류를 위한 농어촌 EXPO'를 추석·농업인의 날 등 기념일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. 농식품 전시·판매 및 홍보, 민속놀이 체험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. 이를 연례적·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.

-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시회 등 행사관련 예산과 지자체·관련 기관이 재원을 공동 분담하여 100~200억 원의 행사관련 예산('08년)을 확보하겠습니다.



VISION 3

농어촌 · 농식품

목표 9

농어촌 생활수준, 높이겠습니다.

'살맛 나는 농어촌 만들기'

상·하수도 보급률 2012년까지 70%로 확충 / 농어촌 생활공간의 현대화

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머물고 싶도록 농어촌을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개선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입니다.

- 친환경·생태보전형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추구합니다. '농어촌다움(Amenity)'을 유지하는 머물고 싶은 휴양공간으로 육성하고 도시아이들의 친농 기회를 확대하여 도·농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.

- 국민의 20% 농어촌 인구 유지를 목표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.

(FQ)03한 나라 본 책(108~133) 2008.3.29 5:8 AM 페이지 120 western

■ 물·길·집·통신 등 기초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 상·하수도 시설 보급 확대, 농어촌도로 확·포장, 이동통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.

■ 해중림 조성 등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여 해양생태관광공간을 늘리겠습니다.

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 / 농어촌 영어교육 촉진

세계화·정보화시대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리적·공간적 차별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도·농간 영어격차는 심각합니다.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.

■ 모든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도시민 대비 교육차별을 받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.

■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교를 2007년 현재 1,300개소에서 2012년에는 3천 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


(FQ)03한 나라 본 책(108~133) 2008.3.29 5:8 AM 페이지 122 western

기숙형 공립고(150개) 선정 농어촌에 우선 배치 /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 확대

대도시지역의 우수한 교육환경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인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에 기숙형 체제를 선정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중소도시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및 우수대학진로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,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- 교육문제가 이농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고 장학금 등 학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.

- 영·유아 양육비 지원을 모든 농어가로 확대하는 한편 읍·면 지역에 국·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.

- 농어촌 초·중·고교생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, 기숙형 공립고(150개소)를 선정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
- 농어촌학생의 대학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국립대학 입학정원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. 서울 및 각 시·도에 농어촌 출신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고,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무이자융자를 확대하겠습니다.

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/ 방문의료체계의 확충

농어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이를 통해 농어촌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- 방문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. 방문의료 시행병원과 이동의료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. 마을회관을 건강관리센터화하여 의료·문화·오락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.

-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농어촌특례를 적용하여 초고령사회 단계의 시·군 지역에 농촌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. 65세 이상 노인에 교통카드 등 교통수당을 현실화하겠습니다.

- 경영이양직불의 확대 활용으로 10년 이상 영농·영어 종사 농어민에 연금 지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농어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,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융자지원(금융기관에 손해 발생시 정부가 보증)하도록 하겠습니다.

(FQ)03한 나라 본 책(108~133) 2008.3.29 5:8 AM 페이지 124 western

농어촌 뉴타운 조성 / 청년 농어업인 유치

농어촌의 청년인력이 줄어들고, 인구가 감소하는 등 경제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무엇보다 열악한 생활 주거환경에 기인한 까닭입니다.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만 농어촌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, 농촌경제가 활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■ 농어촌 주거환경을 신도시 수준으로 살기 좋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여 30~40대 청년농업인을 유치하겠습니다. 원어민 교사 배치 등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을 만큼의 교육·거주·문화·의료·오락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

■ 신도시 건설방식의 집중 투자로 젊은 농어업경영인, 귀농어·귀촌자 등의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. 도시 접근성이 좋은 지역, 역사·문화 등 특화된 향토자원이 있는 지역,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겠습니다.

■ 인구 과소화 문제와 저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구매력 있는 은퇴자의 농어촌 유치를 위해 저렴한 명품형 실버타운 유형을 발굴하겠습니다. 은퇴자들이 타운에서 다양한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, 미니 골프코스, 의료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배치하겠습니다.

■ 5도 2촌형(5일 근무 - 2일 휴식) 생활을 영위할 휴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. 도시민의 농어촌 지역 주택구입시 1가구 1주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.

■ 농촌체험마을, 테마공원사업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원을 다양화하고, 2009년부터는 농어촌 집단주거단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임대주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.



VISION 3

농어촌 · 농식품

목표 10

농어민 살림, 보호하겠습니다.

'돈 버는 농어업, 빚 없는 농어민으로'

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/ 농가소득의 보전예산 확대

한미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라 농어가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EU ·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농어업의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.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시킬 소득안정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.

- 농수산물 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농어민소득직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「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」을 제정하겠습니다.
- 농가단위로 소득을 안정시키는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업예산의 35%까지(3조 5천억 원 이상) 확대하겠습니다.
- 어장휴식보전제도, 친환경직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보전제('07년 6월 도입)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어민피해를 보전하겠습니다.
- 감척어민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일반감척 폐업지원 국고보조금 비율을 현행 50%에서 60%로 상향하고 자부담비율을 20%에서 10%로 내리겠습니다.



(FQ)03한 나라 본 책(108~133) 2008.3.29 5:8 AM 페이지 128 western

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/ 농어민 악성부채 부담 해소

농어가 부채의 부담이 농어민의 투자의욕과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민의 악성부채 부담을 해소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합니다.

- 「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농어가가 만성적 부채구조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농어민이 농어업 자산을 농지은행 등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신탁한 자산을 이용하여 20년간 부채를 분할상환토록 하겠습니다.

- 장관 직속으로 '부채대책특별위원회'를 구성하겠습니다. 농어가 장기·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농어가부채정리기금(공적자금)을 마련하고 농신보기금 규모를 확충하고 보증비율도 확대시키겠습니다.

농어업재해에 대한 선지불·후정산시스템 확립 / 농어업 재해 신속 보상 및 범위 확대

농어민들이 불확실한 재해에 대비하여 영농·영어에 편안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·가축·양식수산물·농어업시설 등을 포괄하는 농어업 재해보험 체계가 필요합니다. 특히 신속한 재해의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선지불·후정산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.

-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액을 확대하겠습니다.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2012년까지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 현행 태풍·우박·동상해·집중호우 등에 한정된 보상재해의 범위를 향후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,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율도 높이겠습니다.

- 농어업재해시 복구비 현실화율을 현행 66%에서 2012년 80%까지 상향하고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선지불·후정산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. 태풍, 산사태 등 대형재해로 바다오염시 발생되는 어민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(농작물재해보험,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, 풍수해보험,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)을 총괄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 농작물, 가축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.

- 「농어로작업재해지원법」(가칭)을 제정하여 농작업·어로행위시 있을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.

(FQ)03한 나라 본 책(108~133) 2008.3.29 5:8 AM 페이지 130 western

비료·농약·사료 등 조세감면 연장 / 농어업자재 가격안정화 대책

국제유가 및 곡물가 급등으로 영농·영어 자재에 대한 농어민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시장개방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영농·영어 자재가격을 안정시켜 농어민들의 영농사기를 높여줘야 합니다.

- 비료·농약·사료 및 농축 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을 위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개정하겠습니다. 유기질 비료의 지원물량을 늘리고 보조단가도 높여서 농업인의 비료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 지원물량은 현행 154만 톤에서 200만 톤 이상으로 하고 보조수준도 현행 17% 수준에서 30%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-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농가에는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사료업체에는 원료구매자금지원을 확대해 주고 사료원료 수입시 세제지원을 통해 사료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

-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을 확대(3 → 10품목)하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('11년까지)하며 비료·농약·사료 및 농축임 어업용 기자재 가격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시한 및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확대·면세기한도 연장하겠습니다.

- 농자재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겠습니다.

농기계임대사업단 설치 /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

개인마다 비싼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은 농가의 경영압박 및 과중한 부채의 원인이 되는 실정입니다. 농민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

- 시·군 단위로 '농기계임대사업단'을 설치하여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. 2012년까지 350개소를 설치하며 임대사업소당 지원단가를 현행 8억 원 수준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- 임대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을 개정('08년)하겠습니다. 대형농기계(무인헬기, 대형방제기 등) 임대사업은 농협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

(FQ)03한 나라 본 책(108~133) 2008.3.29 5:8 AM 페이지 132 western

농어민정년기준법 제정 / 농어촌 법률행정지원 확대

농어민의 교통사고 등 유사시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농·어촌 소외지역 주민들의 법률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농어촌 법률·행정지원서비스가 개선 확대되어야 합니다.

- 「농어민정년기준법」을 제정하여 유사시에 합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.

- 법률구조공단을 시·군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여 농어촌 시·군, 읍·면 지역 주민 약 1천만 명에게 법률복지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.

